실종자 대부분 청년 실업자…좌절과 상실의 '청춘 묵시록'

그들은 왜 캄보디아로 갔나

광주·전남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청년들이 실 종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, 취업난과 자영업 실패, 부채 부담 등을 겪다 '고수익 해외 일자리'에 현혹돼 캄보디아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.

16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태국 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한 A(38)씨는 청년 창업 지 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폐업해 생활고에 시달린 것 으로 나타났다.

A씨는 농산물 가공 및 납품, 빵 판매 등 사업을 했다가 3년여만에 폐업했으며, 실업자가 돼 적지 않은 빚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. A씨는 최근 실 종됐다가 지난 15일 가족과도 영상통화를 해 안전 취업난 · 자영업 실패로 빚에 허덕 여수 30대 창업 참여했다가 폐업 광주 30대 미취업에 경제난 겪어 광주·전남 청년고용률 최저 수준 생계 막막 속 고수익 유혹 넘어가

여부를 확인했으며, 현재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.

지난 1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실종된 광산구 출신 30대 B씨도 자영업을 해 보려다 폐업해 상당 기간 취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. 또 광주 시 서구에 살던 30대 C씨도 식당 일을 하다 그만두 고 취업하지 못해 가족에게 수차례 10~20만원 돈 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경제난을 겪다 캄보디 아로 출국,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.

경찰이 추적 중인 캄보디아 실종 광주•전남 지역 민들은 모두 20~30대 청년층이자 실직자 또는 무 직자로 사업 실패나 취업난 등을 겪었다는 게 경찰

광주·전남의 청년층 취업률은 하향세다. 통계청 에 따르면 광주 청년층 고용률은 2020년 39.6%, 2021년 37.3%, 2022년 38.8%, 2023년 38.9%, 2024년 38.1%로 하락했다. 전남의 경우 2020년 37.9%, 2021년 37.2%, 2022년 40.1%, 2023년 39.4%, 2024년 41.2%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(46.1%)를 넘지 못하고 있다.

이는 광주·전남 지역 내 정규직, 대기업으로 대표 되는 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으로 대 표되는 2차 노동시장 사이 격차가 크고, 고소득 일 자리가 부족하고 고용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.

취업을 포기하고 사업에 뛰어든 청년들도 광주• 전남에서는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 다. 국세청 국세통계포털(TASIS)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폐업 사업자 수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00만 8282명으로, 전년(98만 6487명) 대비 2만 1795명 늘었다. 같은 기간 광주와 전남 폐업 사업 자 수는 각각 2만 6062명, 2만 9542명으로 총 5만

2025년 10월 17일 금요일

국세청 자료상 지난 2014~2023년 사이 광주의 폐업률은 11.8%로, 인천(12.1%)에 이어 전국에 서 두 번째로 폐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.

광주일보

청년들의 빚도 적지 않다. 2024년 '가계금융복지 조사'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39세 이하 가구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9.8%, 저축액 대비 금융부 채 비율은 132.2%로 다른 나이대에 비해 가장 빚 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.

경찰 관계자는 "해외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는 이 들은 대다수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다. 더구나 오랫동안취업이 안되면 '한탕주의'처럼 고수익유 혹에 더 빠져들기 쉽게 되기도 한다"고 말했다.

/서민경 기자 minky@kwangju.co.kr



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 공유해요

16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솔로몬 로파크 저시티스홀에서 '발굴하고 배우고 전파하는'이란 주제로 열린 2025 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성과공유회에 참가한 주민과 기관단체 회원들이 다양한 체험부스를 이용하고 /나명주기자mjna@kwangju.co.kr

국·공립대 조교 고용 불안 시달린다

교육공무원 불구 법과 시행령 불일치로 해마다 재임용 심사

원생 포함)는 정년이 보장된 교육공무원이면서 도,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로 해마다 재임용 심사 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

광주 전남 대학원생들이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 도 아닌 모호한 사회적 지위 때문에 노동자로서 법 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〈광주일보 10월 16일 6면〉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

16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(서울 광진구을) 의

국·공립대학에서 상근직으로 일하는 조교(대학 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·전남 지역 5개 국·공립대의 조교는 424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. 평균 조교 충원율은 99.7%로 집계됐다.

> 하지만 일부 대학은 조교의 재임용 횟수를 제한 하고 있어 신규 채용 때 다시 지원해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.

조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만 62세의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는데도, 교육공무 원임용령 제5조의2(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)

4항에서는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

목포해양대에서는 최근 5년간 조교 재임용 탈락 율이 2.2%를 기록했으며, 이는 대구교대 (2.5%), 전주교대(2.4%), 청주교대(2.3%)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.

또 지역 국·공립대 중 3곳(순천대, 목포대, 광주 교대)은 재임용 횟수(2~5회)를 4~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, 정해진 횟수를 넘긴 조교의 경우 신규 채 용에 다시 응하도록 하고 있었다. 사실상 정년은커 녕 기간제 계약직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다.

고민정 의원은 "국공립대 조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고등교육 연구와 학사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"고 /서민경 기자 minky@kwangju.co.kr

경찰, 올 캄보디아 공조 요청 34건…회신은 8건

올 한 해 경찰이 인터폴(국제형사경찰기구)을 통해 캄보디아에 요청한 국제공조가 30건이 넘지 만 극히 일부만 회신이 온 것으로 나타났다.

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 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월부터 10월 15일까지 캄보디아에 34건 의 국제공조를 요청했다.

혐의별로 보면 보이스피싱 등 경제 범죄가 26건 으로 가장 많았고, 약취유인 4건, 성범죄 2건, 폭 행·협박·상해 1건, 강도·절도 1건이었다.

캄보디아 측의 회신은 8건(23.5%)에 그쳤다.

보이스피싱이 6건, 약취 유인이 2건이다.

경찰이 가장 많이 국제 공조를 요청한 곳은 중국 으로 85건이었다.

보이스피싱 등 경제 범죄가 45건으로 가장 많았 고, 그다음이 '기타'로 26건이었다. 경찰은 범죄단 체 가입·활동 혐의가 경찰 분류 통계에 잡히지 않 아 '기타'에 속한다고 설명했다.

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공조 요청은 62건이었으며, 다른 접경국 태국은 11건이었다. 캄보디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회 신율은 경찰이 집계하지 않고 있다.

광주·전남 징계 경찰관 최근 5년간 201명

광주·전남에서 최근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경찰 관이 2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(전북 익산을) 의원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(2021년~2025년 6월)간 광주경찰청 소속 경 찰공무원은 총 5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 다. 2021년 12명, 2022년 8명, 2023년 15명, 2024년 14명, 2025년 6월까지 3명 등이었다.

전남경찰청에서도 2021년 25명, 2022년 57명, 2023년 22명, 2024년 28명, 2025년 6월 17명 등 5년 사이 14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 경찰 비위 감시를 위해 설치된 각 시·도 경찰청

의 시민감찰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2개 월마다 정기 회의를 열도록 규정됐지만 광주·전남 경찰 내 실제 운영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. 광주경찰청은 2021년 2회 이후 매년 1 회만 개최했고 올해는 아직 회의가 열리지 않았 다. 전남경찰청 역시 2021년 1회, 2022년 2회, 2023년에는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2회 이후 올해 아직 열리지 않았다.

한 의원은 "경찰이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 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"이라고 말했다.

/서민경 기자 minky@kwangju.co.kr

관용차 사적 사용 혐의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형 약식기소

여수시청 비서실장(별정 6급)이 관용차를 사적 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다.

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여수시 비서실장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 소했다고 16일 밝혔다.

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께 여수시 선소대 교 인근 도로에서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.

A씨는 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있었으며, 사고 이후 뒤늦게 배차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. 사고 차량은 반파돼 폐차됐다.

A씨가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하거나,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 시 정식재판이 열린다.

여수시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.

/유연재 기자 yjyou@kwangju.co.kr

